

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(제7판) 추록

P 012 대법원 판례 반영

6. 변호인 등의 피의자·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: ① 헌법재판소는 종래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(1991.7.8. 89헌마181), ② 이후 변호인의 조력권 중 변호인의 변호권(변호인의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 수사기록 중 고소장·피의자신문조서 열람권, 변호인의 구속피의자 신문참여권)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는 핵심부분으로서 그 실현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(2003.3.27. 2000헌마474; 2017.11.30. 2016헌마503; 2019.2.28. 2015헌마1204), **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후방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고**(2017.11.30. 2016헌마503), **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예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**(2019.2.28. 2015헌마1204). ③ 한편 대법원은 “**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(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)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**(헌법재판소 2017.11.30. 2016헌마503 결정, 헌법재판소 2019.2.28. 2015헌마1204 결정 등 참조)”고 판시하였다(2022.6.30. 2021도244).^{*}

P 036 2024. 3. 공직선거법 개정_지역구 국회의원·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조정

■ **국회의원의 정수** :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상 **200인 이상**의 범위에서 **법률로**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, **공직선거법**에서는 “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**300명**으로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(제21조 제1항).^{*}